

국민의 소리

국민권익위원회

2026년 6월 1주차 동향 (6.1.~6.7.)

민원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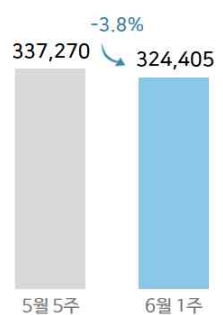
순위	민원 키워드	주요 내용	건수
1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 선정 기준 관련 이의신청	8,277
2	고양은평선	노선 연장 요청	3,796
3	■■■종합병원	종합병원 신설 절차 이행 촉구	1,596
4	◆◆시 신혼희망타운	사업지연 피해 보상 요구	1,505
5	@@@역 변전소	변전소 설치 반대	1,161
6	불법광고물	전단지, 현수막 등 신고	1,058
7	쓰레기 무단투기	무단투기 신고	961
8	●●지구 데이터센터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870
9	방역 요청	해충 방역 요청	729
10	위례삼동선	위례신사선 연계 요청 및 연계 추진 반대 등	423

데이터센터 반대
불법광고물
신혼희망타운
위례삼동선 종합병원 방역
고유가 피해지원금
고양은평선
변전소 설치반대
쓰레기 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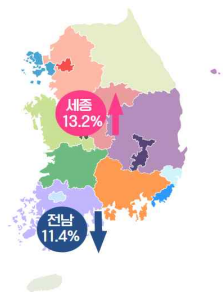
※ 국민신문고, 지자체 별도 창구로 접수되어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데이터 분석결과(교통단속민원 제외)
※ 5월 5주차 대비 순위 신규진입 키워드: []

- 6월 1주차 민원은 324,405건(일평균 46,343건)으로 지난주(337,270건) 대비 3.8% 감소
- 지역별로는 세종(13.2%), 강원(2.4%) 증가, 전남(11.4%), 경남(6.6%) 등 감소
- 분야별로는 방역 요청 등 보건 분야 증가, ○○스토아 인수 관련 민원 등 산업·통상 분야 감소

【 민원 추이 】



【 지역별 증감 현황 】



【 분야별 현황 】



주요 민원

□ ▲▲시 △△지구 공사현장 소음·분진 등 피해 개선 요청[177건]

-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분진 피해 및 공사현장의 배관설치로 인한 장애인 통행로 방해 문제 해소 요청

- **검토요청** ▲▲ △△지구 ▽▽▽▽▽▽ 아파트 건설 현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최근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발생하는 극심한 소음과 분진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작업 시 발생하는 기계음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의 소음(특히 이른 아침·야간 시간대)으로 창문을 열고 생활할 수 없으며, 수면 방해와 스트레스가 심각합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미세먼지와 흙먼지가 바람을 타고 주거지 쪽으로 날아와 차량과 베란다에 먼지가 수북하게 쌓이고, 창문을 열어둘 수 없어 환기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장 주변 도로의 주기적인 청소 및 살수차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먼지 피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6.1.)
-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배관이 장애인 점자블록 위로 설치되어 장애인들의 눈이 되어 주는 점자블록을 가리고 통행로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4 곳이나 이렇게 되어 있으니 확인하고 원상복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6.6.)
- 아파트 공사현장 앞 점자블록 위로 배수시설을 설치해서 사용하는 건설사의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할수 없습니다. 점자블록 위 시설물 철거 요청합니다.(6.2.)

□ ★★시 ☆☆☆☆ 오피스텔 설계변경 관련 민원[298건]

- 오피스텔 분양사업자 등의 무단 설계변경으로 재산권 침해를 우려하는 수분양자들이 정당한 권리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해 위법여부 확인을 요청

- 분양자료·광고 내용과 달리 피난대피층이 축소 또는 변경되었음에도, 수분양자들에게 사전 고지 및 동의 절차 없이 시공이 진행 되었습니다. 피난대피층은 건축물의 안전성과 직결되며, 특히 고층 건축물에서 재난 발생 시 대피 기능을 수행하는 중요 시설입니다. 시행사는 분양주체로서 분양내용의 적정성, 변경사항의 관리 책임을 부담하고 시공사 역시 설계변경 및 실제 시공 과정에 직접 관여한 주체로서 해당 변경 내용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적절한 고지 및 동의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분양 당시 중요 내용이 사후적으로 변경되더라도 아무런 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건축물분양법의 입법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6.2.)

- 본 사건은 다수 수분양자의 권리와 직결된 사안으로, 분양 당시 내용과 다른 시공이 이루어졌음에도 계약자들에 대한 고지 및 동의 절차가 없었던 점 등 중대한 위법성이 의심되는 사건입니다. 본 사건이 장기화될 경우 피해자들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는 더욱 가중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검토 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판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6.5.)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민원[173건]

○ 6·3 지방선거 당일 일부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사태 관련, 선거 관리 부실에 대해 항의하고 진상조사 및 대책 마련 등 요구

- 특정 지역에서 유권자 수 대비 투표용지를 50% 수준만 준비해 유권자들이 투표권을 즉각적으로 행사하지 못하고 대기해야 했으며, 개표 지연 및 시민들과의 대치가 발생하는 등 극심한 사회적 혼란이 초래되었습니다. 투표용지가 턱없이 부족하게 준비된 구체적인 경위, 당시 의사결정 과정, 현장 대응 매뉴얼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수요 예측 및 투표용지 배부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여, 향후 어떠한 선거에서도 이와 같은 참정권 침해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명확한 제도적 보완책을 수립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6.5.)
- 금번 지방선거 일부 지역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 지연 및 연장 투표가 발생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이 발생한 투표소는 전국적으로 어디이며, 특정 지역에 집중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지 부족으로 투표를 완료하지 못한 유권자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몇 명인지, 오후 6시 출구조사 발표 이후에 투표를 한 유권자는 총 몇 명이며, 투표소별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선관위는 각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사실을 최초 언제 인지하였으며, 즉시 추가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거는 결과뿐 아니라 절차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명확한 사실관계 공개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청드립니다.(6.4.)
- 사전투표의 경우, 통합선거인명부와 신분증 확인 기계를 통해 본인 확인과 투표용지 발급이 한 번에 이루어집니다. 반면, 본투표는 등재번호를 일일이 대조하고 선거구별로 투표용지를 1·2차에 걸쳐 따로 교부받는 전근대적인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유권자가 장시간 대기하는 큰 불편을 겪을뿐더러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본투표 과정에서 용지를 두 번 발급받은 사례가 있다는 소식처럼 용지 중복 교부 문제도 있습니다. 본투표의 명부 확인과 용지 교부 절차가 수작업에 의존하다 보니 이러한 치명적인 관리 부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6.5.)

알 림 판

1.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는 한 주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정보분석시스템(www.pias.go.kr)에 수집된 민원 중 증가 추세이거나 관계 기관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국민권익위에서는 관계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조치해줄 것을 협조 요청하고 이후 조치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 금주의 검토요청 사례 >

페이지	제목	민원번호	소관기관
2P	▲▲시 △△지구 공사현장 소음·분진 등 피해 개선 요청	1AA-2606-0035541 1AA-2606-0276191	경기도 평택시

2. 민원분석시스템 이용신청 안내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등을 검색하고 분석이 가능한 민원정보분석시스템(www.pias.go.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의 민원업무 담당자, 민원빈발 부서의 사업 담당자 등은 분석시스템을 기관별 민원분석 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www.pias.go.kr(업무망)로 접속하셔서 공지사항의 ‘사용자 계정신청 안내’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망은 방화벽 포트 허용 조치를 위해 Helpdesk(070-4108-3625)로 문의 요망